

# 전남 산재 다발지역...여수·대불산단 특성 맞는 대책 필요

### 시설 노후화에 만명 당 사망율 0.69%...17개 광역지자체 중 2번째 중대재해 조례 제정·전담 조직 만들고 맞춤형 산재병원 설립해야

#### 조선대병원 이철갑 교수 분석

전남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 사고가 잦은 곳은 노후국가산단이 자리한 여수·광양·순천지역이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일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한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남지역 중대재해 현황 및 안전한 전남만들기"라는 발제문에서 전남지역 사고사망만인율은 0.69%로 강원(0.85%)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경남(0.63%)과 충남(0.60%), 경북(0.55%)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남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3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여수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36명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광

양(29명) 순천(19명), 고흥(15명), 목포·해남(각 13명), 영암·완도·화순·나주(각 12명) 순이었다.

이 교수는 전남 지역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25개 광역·기초 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나주(2024년 2월 21일 공포)가 유일하다.

이 교수는 "현재 전남 각 지자체에는 '중대재해 대책팀'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에 '사무위탁조항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외부기관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산단 특성에 맞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 1967년 착공 이래 고질적인 노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여수산단에서는 14명이 사망, 94명이 부상한 것도 설비 등 인프라 노후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여수산단 고용노동부 주관 여수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권고·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는 468건에 달했다. 이중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가 63%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여수화학산단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문제와 언어소통 문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문 센터장은 언급했다.

여수산단을 포함해 준공 27년이 된 영암 대불산단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도 거론됐다.

문 센터장은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와 최저가 낙찰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사후 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단의 특성에 맞는 산재병원을 세우고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부수적·수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업무로서 산업안전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남의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가을이 옵니다 20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직원들과 어린이들이 메리골드·백일홍 등 가을 꽃을 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뉴스 댓글 4개 중 한 개 '왜곡·편향'

#### 기념재단, 오늘 결과 발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 등에 달린 댓글 4개 중 한 개는 5·18을 왜곡하거나 편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18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5년간 포털 사이트(네이버)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28개 언론사 뉴스 댓글과 최근 2년간 유튜브에 게시된 5·18 관련 영상 콘텐츠의 댓글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네이버 뉴스 기사 205건에 댓글 2만 5035건이 작성됐으며, 이 중 6417건(26.63%)이 5·18 관련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왜곡·편향 댓글은 '북한군 개입설', '가짜 유공자설', '무장 폭동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5·18은 폭도들에 의한 광주사태가 맞으며 전두환이 잡지 않았으면 북한이 내려왔을 것', '5·18 유공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5·18은 공산화운동이자 폭동이며, 광주는 쓰레기 도시이자 빨갱이 하수인들이다'는 등 댓글 사례가 확인됐다.

왜곡 댓글에 포함된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면 '유공자'가 2232회로 가장 빈번했다. '명단'

(1404회), '북한' (1142회), '전라도' (862회), '폭동' (791회), '빨갱이' (620회), '가짜' (462회) 등 키워드도 빈도가 높았다.

재단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국가들에서 극우들에 의한 자국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조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문제가 단순한 언론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며 "보다 단호하고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실천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표와 토론회는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재단은 토론회에서 5·18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AI) 딥러닝 모델을 시연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1심 불복 항소

'매일형 유지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 겸 검찰이 모두 1심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0일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개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립유치원장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대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고 추징금 6200만 원도 부과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를 대상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선관위, 총선 정치자금 위반 혐의 6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B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범위를 벗어난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로 회계보고서

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 집중조사(4월 22일~8월 19일)를 거쳐 현재까지 16건(고발 4건, 경고 12건)에 대한 고발·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치매 모친 투표 돕다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아들 징역형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권 행사를 돕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권에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기표소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잡아주며 특정정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법으로 기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친 대신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으려는 순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문제를 삼으며 제지를 하자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2장을 찢어버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